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제18402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2200-500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9년 6월 25일 (음력 5월 3일) 목요일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2015 광주 U대회 남북 단일팀 만든다

김영진·정의화 의원 특별법안 마련…남북 경색 해소 기대

오는 2015년 8월 개막할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U대회)에서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 대회 성공 개최를 뒷받침할 U대회 특별법 제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U대회 준비 과정에서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실무접촉이 활발하게 진행될 경우 최근 남북한 동시 월드컵 본선 진출에 이어 스포츠를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3면〉

24일 본보가 입수한 '2015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특별법'(김영진·정의화 의원의 공동 성안) 초안에는 이같은 내용 등 U대회의 차질없는 준비·개최를 위한 각종 법규가 수록돼 있다. 법안의 작성에는 김영진·정의화 의원, 광주시, 국회, 국내의 해외 스포츠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했으며, 2003대구 하계U대회 특별법 등 다수 법률안이 참고·발췌됐다.

법안은 총칙과 ▲U대회 조직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U대회 지원위원회 ▲대회 관련 시설 ▲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 교류 등 모두 6개장과 부칙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제6장 '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 등' 조항은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반도에서 평화와 화합의 제전을 치를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대회를 통한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여 남북단일팀 구성 등을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남북 단일팀 구성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대회를 통해 남한과 북한 간의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개발해 추진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의 남북 체육교류 확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이는 지난 2003년 대구U대회 특별법은 물론 각종 국제대회 특별법에도 없는 특례 조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가 U대회 유치 과정에서 국제대학스포츠 연맹(FISU)에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제안한 데다 남북단일팀이 구성되면 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의 브랜드를 한층 높일 수 있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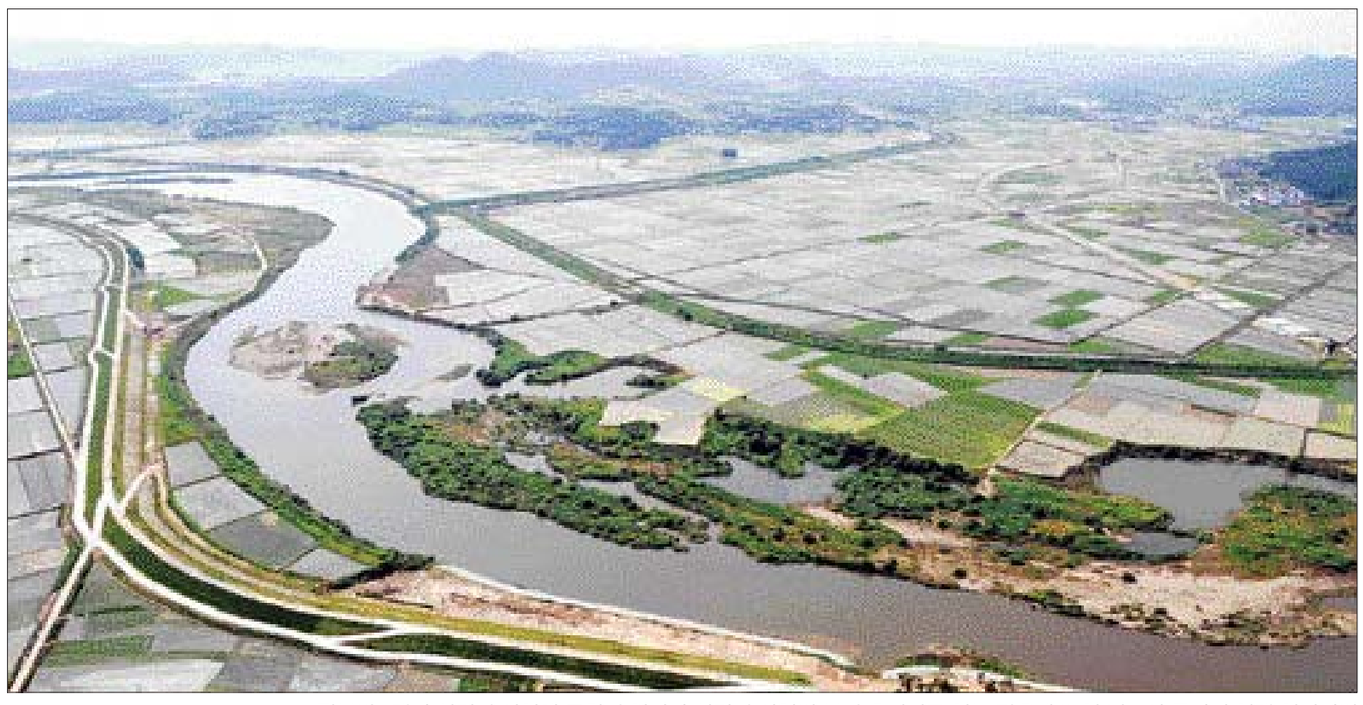
특별법을 공동 성안한 김영진 의원과 정의화 의원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 제정하기 위해 현재 국회의원 295명 전원을 상대로 서명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7월께 법안 서명 작업이 마무리되면 광주에서 특별법 관련 공청회를 가진 뒤 범국가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김영진 의원은 정기국회에서 '광주U대회 지원특위'의 구성을 제안, 특위가 꾸려질 경우 국회 차원에서 국제경기대회를 지원했던 해외 도시를 방문해 선진 사례 등을 수집, 특별법을 보강할 계획이다.

김영진 의원은 "U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의 구성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것은 광주 U대회 특별법에만 있는 것이다"며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국회 제출 전까지 U대회 성공 개최의 토대가 될 법안을 다듬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유유히 흐르는 영산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나주시 동강면 일대 영산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는 모두 2조6천억이 투입돼 생태하천, 수중보, 자전거도로 등이 들어서게 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헬기 조종= 전남도소방항공대 오동진·신화철 기장〉

영산강살리기 1,408억 증액

익산국토청 세부 내용 확정

다기능 보 설치 사업비 늘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세부 사업내용이 최종 확정됐다.

최종 확정된 영산강 살리기 사업비는 지난 8일 발표된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확정 당시 예상 사업비 2조6천461억 원에 비해 1천408억 원이 증가했다.

익산국토관리청은 24일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총 2조7천869억 원을 투입해 생태하천 조성·홍수조절지·제방보강·다 가능 보 설치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영산강 살리기 프로젝트' 세부 사업내용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 8일 발표된 마스터플랜과 크게 달라진 점은 보 설치 사업비가 많이 증가하고, 영산포구 개발 등 기타 사업비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

세부 사업내용에 따르면 함평천 합류점인 나주시 동강면~다시면 사이와 광주천 합류점인 광주시 남구 승촌동에 각각 길이 12.29km, 13.45km 규모의 2개의 다기능 보가 설치된다.

애초 마스터플랜은 2개의 보 설치에 1천835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됐지만, 이번 최종 사업내용에서는 3천158억 원이 증가했다. 규모는 마스터플랜 발표 당시와 크게 다르진 않지만, 사업비는 크게 늘었다.

담양군 월산면 용천과 화순군 이양면 지석천에 들어설 2개의 홍수조절지는 애초 마스터플랜대로 반영됐다.

다기능 보 설치 사업은 다음달 턴키 방식으로 발주해 오는 9월 착공에 들어가게 되며, 홍수조절지는 내년 2월 착공될 예정이다.

반면, 영산포구 재개발과 구하도 복원 등의 기타 사업비는 1천312억 원으로 애초 사업비 2천166억 원에 비해 절반 가량이 줄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크게 3개 공구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영암군 삼호면(영산강 하구언)~나주시 동강면(함평천 합류점)까지의 37.9km ▲광주시 서구(광주천 합류점)~담양군 봉산면 14.90km ▲담양군 봉산면~담양군 담양읍(금월교) 22.22km 등 3개 공구로 나뉘어 사업이 발주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최종 사업내용 확정도 설계에 따라 사업비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업용 저수지 14개소, 영산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 등의 농업기반시설(1조2천395억 원)과 환경시설인 수질개선사업(483억 원)은 애초 마스터플랜 확정 사업비가 그대로 반영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野 4당, 단독국회 공동 대응

與, 내일 개회 강행

6월 임시국회 단독 개회를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으나 물밑 협상에 진전이 없어 26일 국회에서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특히 민주당·민노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 4당 대표가 26일 오전 회동을 갖고 한나라당의 단독 국회 소집에 맞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해 전선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26일 단독 개회를 저지하기 위해 전날에 이어 24일에도 국회본청 중앙홀을 점거했다. 민주당은 또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국회가 개회되더라도 상임위원회 참가 거부를 결정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지도부가 총출동해 민주당 의원들의 점거농성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방송에 대한 기득권을 지키려고 이명박 정부 발목을 잡지 말고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한나라당의 단독 국회 소집을 거듭 비난하며 '사즉생'의 각오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6일 야 4당 대표 간 회동에서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농성 중인 국회 로텐더홀에서의 야 4당 공동 의원총회 개최 등의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 준비되면 공군지휘권도 넘길 것"

레밍턴 美7공군사령관

제프리 레밍턴 미7공군사령관(유엔군·한미연합사·주한미군 부사령관)은 24일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일환으로 한국 공군이 준비되었을 때 공군지휘권도 넘겨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밍턴 사령관은 이날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현재의 공군구성군사령부는 2012년 4월 (전작권 전환시) 해체돼 연합공군사령부로 재창설되며 구성군 중 전작권 전환 이후 유일하게 연합체제를 유지할 조직으로서 연합공군참모와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한미통합으로 지속운영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의 합참의장이 모든 작전권을 쥐게 되지만 공군의 경우 한국 공군의 역부족으로 사령관을 미군이 맡게 된다. 물론 미 사령관이 우리 합참의장의 작전통제에 철저히 따라야 해 미 공군도 한국의 지휘권 아래에 있게 된다. /연합뉴스